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
주요 내용

2021. 6. 28.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Ⅰ. 2021년 상반기 경제운영 성과 ····· 1

Ⅱ. 향후 경제여건 평가 ····· 3

Ⅲ.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····· 5

【 완전한 경제회복 】

1. 더 빠르고 강한 회복 ····· 6

2.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····· 11

3.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 ····· 13

【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 】

1. 새성장동력 확보 ····· 16

2.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 ····· 20

Ⅳ. 2021~22년 경제전망 ····· 23

Ⅰ. 2021년 상반기 경제운영 성과

◇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여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포스트코로나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에 정책역량 총동원

1 [경제회복] 지난해 310조원 규모 지원대책 추진에 이어, 금년에도 내수·투자활성화, 수출력 보강 등을 통해 빠르고 강한 회복 및 반등에 진력

* (내수) 소비증가분 특별소득공제, 승용차 개소세 인하, 고효율가전 구매환급, 소비쿠폰 등
(투자) 110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, 신규 설비투자 세제·금융지원, 유턴기업 지원 강화 등
* (수출) 물류·출입국 등 현장애로 해소, 비대면/온라인 마케팅·플랫폼 지원, 수출금융 확대,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등에 따른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 지속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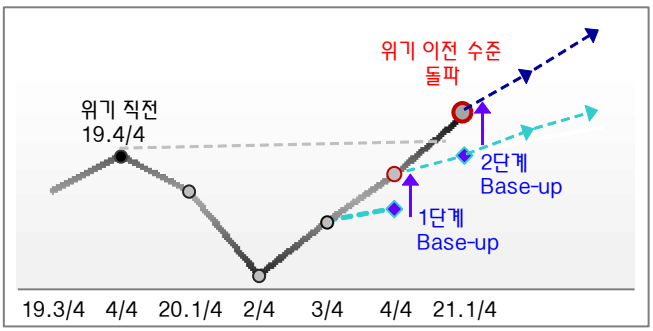
☞ **금년들어 당초 예상 및 주요국 대비 "빠르고 강한 경제회복" 가시화**

※ **'20년은 주요국 대비 역성장폭**(△0.9%) **최소화** <**G20 국가중 3위**>
- **글로벌 경제규모 Top10 진입** (12 → 10위, 러시아·브라질을 제치고 2단계 순위 상승)
- **1인당 GDP, 사상최초** G7 국가인 **이탈리아 추월** (한국 31,637불 > 이태리 31,288불)

❶ (성장)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회복세로 **경제규모 10위권내 선진국중 최초**로 '21.1분기에 위기직전('19.4/4) GDP 수준 돌파

* 성장률 시장 컨센서스/실적 : ('20.4/4) 0%대 중후반 / **1.1%** ('21.1/4) 1% 내외 / **1.7%**

GDP 성장경로 추이



경제규모 Top10 국가 '21.1/4 GDP

('19.4/4 = 100, 선진국, 신흥국)

1	미국	99.1	6	인도	102.7
2	중국	107.1	7	프랑스	95.3
3	일본	98.0	8	이태리	93.6
4	독일	95.0	9	캐나다	98.3
5	영국	91.3	10	한국	**100.6**

❷ (수출) **1~5월 수출액**은 2,484억불(+23.4%)로 역대 최대치 경신
<특히, 4월 이후로는 **높은 증가세 유지중**>

* 수출(%) : ('20.2/4)△20.3 (3/4)△3.5 (4/4)4.1 ('21.1/4)**12.5** (4)**41.2** (5)**45.6** (6.1~20)**29.5**

❸ (고용) 3월 이후 **큰 폭의 증가세**가 지속되면서 점차 회복중

* 취업자수 증감(만명) : ('20.4/4)△44.1 ('21.1)△98.2 (2)△47.3 (3)**31.4** (4)**65.2** (5)**61.9**

❹ (대외신인도) 국제사회는 우리경제의 **빠른 위기 복원력**과 **대외 건전성**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 → 글로벌 위상 공고화

* **포브스**('21.4.30) : "예측을 뛰어넘은 한국경제 회복세.... 회의론자들은 또 틀렸다"
* **IMF**('21.4.29) : "한국은 코로나19 영향을 제어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성공적"
*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, 국가부도위험(CDS 프리미엄)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

2 [포용강화] 소상공인·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, 촘촘하고 튼튼한 고용·사회안전망 보강에도 역점

* (소상공인) 새희망자금/버팀목·버팀목+자금 지원, 공공요금·사회보험료·임대료부담 경감 등
(고용유지) 고용안정지원금, 직접일자리·공공기관 채용확대,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
(안전망)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,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,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

☞ **충격이 취약계층으로 집중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격차확대를 최대한 완충**

❶ (분배지표) 가계소득 증가세가 유지되고, 정책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가 크게 확대되면서 5분위배율도 2분기 연속 개선

* 가계소득 증가율(%) : ('20.1/4) 2.2 (2/4) 3.5 (3/4) 1.8 (4/4) 1.8 ('21.1/4) 0.4

시장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

	'19.1/4	2/4	3/4	4/4	**'20.1/4**	2/4	3/4	4/4	**'21.1/4**
시장소득(A)	13.97	11.25	11.24	10.56	**14.77**	14.38	13.08	11.85	**16.20**
처분가능소득(B)	6.74	5.74	5.76	5.83	**6.89**	5.03	5.92	5.78	**6.30**
개선효과(A-B)	7.23	5.51	5.48	4.73	**7.88**	9.35	7.16	6.07	**9.90**

❷ (안전망) 고용보험·기초생활보장 등 사각지대를 꾸준히 축소

* 고용보험 가입자(만명) : ('18.12) 1,341 ('19.12) 1,384 ('20.12) 1,408 ('21.5월) 1,426
*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만명) : ('18.12) 174 ('19.12) 188 ('20.12) 213 ('21.5월) 22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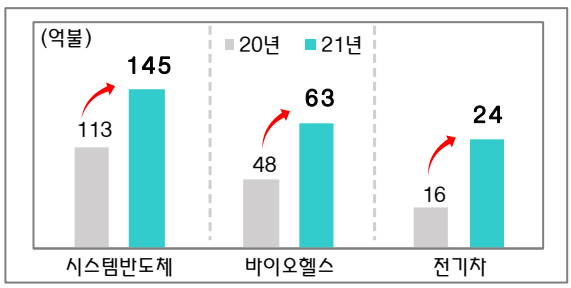
3 [도약준비] 위기 극복을 넘어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 육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면서 포스트코로나시대 경제·사회 구조전환 대비에도 만전

* BIG3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<'20.12>, K-뷰티 혁신 종합전략<'21.1>, 청년 창업활성화 방안<'21.5>, 기술기반 벤처·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<'21.1>,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<'21.2>,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방안<'21.3>,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<'21.4>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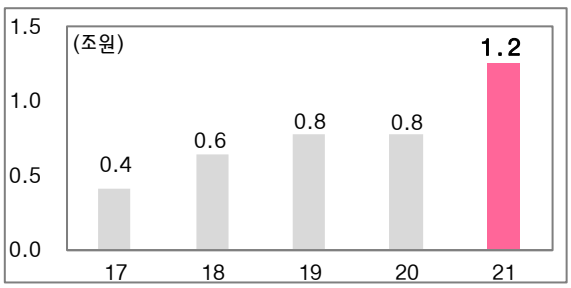
☞ **BIG3산업 및 벤처·창업 활성화 등 성과 가시화, 미래선도전략도 선제적 추진**

❶ (새성장동력) BIG3 등 신산업 분야 수출이 급증하고, 벤처투자 증가세가 크게 확대('21.1분기 +61%)되는 등 제2벤처붐 지속 확산 → '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달성('20년 2위)

BIG3산업 수출(1~5월 누적 기준)



벤처투자 금액 추이(1/4분기 기준)



❷ (미래선도전략)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의 한국판 뉴딜·탄소중립 등 디지털·친환경 경제구조 전환 노력을 높게 평가

* **OECD**('21.5) : 한국판 뉴딜은 투자증가를 통해 **성장 제고** + 경제전반의 **생산성 제고**에 기여
* **무디스**('21.1) : **ESG**(환경·사회·지배구조) **평가 최고등급**(144개국중 독일·스위스 등 11개국) 부여

Ⅱ. 향후 경제 여건 평가

◇ 하반기에도 우리경제는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, 부문별 회복속도가 불균등(uneven)한 가운데 경제·사회 구조 대전환이 가속화

1 수출·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빠르고 강한 회복을 지속 견인 예상

❶ (수출) 美·中 등 주요 교역국 경기회복세 강화, IT 및 신산업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연간 역대 최대치(약 6,075억불) 달성 전망
<다만, 작년 기저효름 감안시 2분기를 정점으로 증가세는 둔화 예상>

* '21년 성장전망(%, IMF, 작년말 → '21.4월) : (세계)5.2→**6.0** (美)3.1→**6.4** (中)8.2→**8.4**
* 글로벌 반도체매출 전망(%, WSTS, '21.3 → 6월) : ('20) 6.8 ('21^{e}) **10.9 → 19.7** ('22) **5.6 → 8.8**
* 수출(%) : ('20.1/4)△1.9 (2/4)△20.3 (3/4)△3.5 (4/4)4.1 ('21.1/4)**12.5** (2/4^{e})**40** (3/4^{e})**17** (4/4^{e})**9**

❷ (투자) 반도체 등 IT 부문 호조에 더하여 비IT 부문도 신기술·친환경 투자 확대 등으로 양호한 증가세 지속 예상

* 설비투자(전기비, %) : ('20.1/4)△1.0 (2/4) 2.7 (3/4) 2.2 (4/4) 0.8 ('21.1/4) **6.9** (4) **3.5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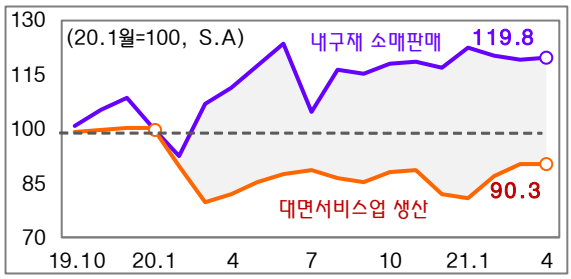
2 내수·고용은 아직 위기충격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개선속도도 완만할 전망이라는 점에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경기의 가시적 개선 제약 우려

❶ (내수) 백신보급 확대 및 심리개선, 소비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대면서비스 중심 이연된 소비가 점차 분출되면서 개선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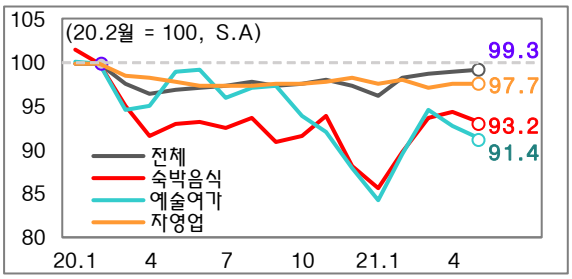
* '21.4월 SA지수 : (서비스업 생산) 100.2 [(대면서비스업) **90.3** (여타서비스업) 103.5]
('20.1월 = 100) (소매판매) 106.6 [(내구재) 119.8 (준내구재) 107.8 (비내구재) 99.9]

▪ 다만, 코로나 불확실성 잔존 및 해외여행 제약 등으로 금년중 위기 이전수준 회복은 어려운 상황<민간소비 : ('20)△5.0% → ('21^{e})+2.8%>

내구재 및 대면서비스업 생산 추이



취업자수 추이



❷ (고용) 민간부문 여건 개선, 정책지원 효과 등으로 증가세는 지속되겠으나,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어려움 지속 우려

* 취업자수 증감(만명) : ('20.4/4)△44.1 ('21.1)△98.2 (2)△47.3 (3)**31.4** (4)**65.2** (5)**61.9**
* '21.5월 취업자수(SA) : (전체) 99.3 [(대면서비스업) **95.3** (여타서비스업) 102.8]
('20.2월 = 100) [(상용직) 101.3 (임시일용직) **97.2** (자영업자) **97.7**]

▪ 금년 고용은 상용직 중심으로 위기이전 수준을 회복하겠으나, 대면서비스업·자영업자 등의 회복까지는 시간 소요 예상

❸ (양극화) 내수경기의 부문별 불균등 회복 및 취약계층 고용 부진 등이 시장소득 격차해소를 제약할 가능성

* 시장소득 5분위배율 : ('19.1/4) 13.97 (2/4) 11.25 (3/4) 11.24 (4/4) 10.56
('20.1/4) 14.77 (2/4) 14.38 (3/4) 13.08 (4/4) 11.85 **('21.1/4) 16.20**

▪ 소득 뿐 아니라 주거·교육·돌봄·자산 등 전반적 격차확대 우려

* 순자산 지니계수(매년 3월 기준, 가금복) : ('17) 0.584 ('18) 0.588 ('19) 0.597 ('20) 0.602

3 위기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대내외 리스크 요인 상존

❶ (소비자물가) 농축산물 수급 개선 등으로 오름폭이 점차 둔화될 전망이나, 국제유가, 장마·태풍 등이 리스크로 잠재된 상황

* CPI(%) : ('20.1/4) 1.2 (2/4)△0.1 (3/4) 0.6 (4/4) 0.4 ('21.1) 0.6 (2) 1.1 (3) 1.5 (4) 2.3 (5) 2.6

- 농축수산물	2.0	3.2	10.3	11.4	10.0	16.2	13.7	13.1	12.1
- 석유류	10.4	△13.7	△10.7	△13.8	△8.6	△6.2	1.3	13.4	23.3

* '21년 CPI 전망(%) : 1.8%내외 [(1/4) 1.1 (2/4^{e}) **2대 중반** (3/4^{e}) **1대 후반** (4/4^{e}) **1대 후반**]

❷ (자산시장) 유동성 급증에 따른 자금쏠림, 부동산·가계부채,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등이 회복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
4 경제·사회 전반의 구조전환도 가속화되면서 선제적·전향적 대응 절실

❶ (산업경쟁력) 디지털·비대면화가 앞당겨지면서 주력 제조업·서비스산업 혁신,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긴요

*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(%, 연평균) : ('90년대) 8.0 → ('00년대) 6.0 → ('10년대) 2.2

*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10년째 60%수준에서 정체, 주요국과 10~20%p 격차 유지
<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(%, '18년) : (韓) 62.4<'19년> (美) 79.8 (日) 69.6 (獨) 68.7 (英) 79.7 >

▪ 특히, 주요국 정부간 시장우위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선진국 수준으로 신산업 전반의 기술력을 높이려는 노력 필요

* (美) 5.9조불 규모 3대 재건정책<American ①Rescue Plan, ②Jobs Plan, ③Families Plan> 추진('21.3)
(EU) 향후 4년간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에 955억유로 투자 추진('21.3)

* 우리 신산업 기술수준(미국=100, '20년) : (ICT·SW) 83 (소재·나노) 81 (생명·보건) 78

❷ (구조전환) 저탄소 경제로의 국제경제질서 변화, 인구충격 심화* 등도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

* ①인구감소(출생자 < 사망자), ②지역소멸(수도권 > 지방인구), ③초고령사회('25년~) 임박 등

▪ 특히, 기후변화에 대응한 글로벌 규제강화*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, 수출·기업 자금조달 등에 부정적 영향 우려

* 美·EU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 본격화, EU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, 플라스틱세 신설, 글로벌 기업·금융사의 RE100(100% 재생에너지 사용) 참여·ESG 투자 확대 등

Ⅲ.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

목 표

완전한 경제회복(4%이상성장 & 고용회복) **+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**

3+2 정책방향

완전한 경제회복

1 더 빠르고 강한 회복

❶ 코로나19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
❷ 내수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뒷받침
❸ 투자 촉진 등 전방위적 기업활동 지원
❹ 수출 6천억불 돌파 총력 지원체제 구축
❺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혁신 촉진
❻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 회복 지원

2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

❶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안정 지원
❷ 소상공인·中企 피해극복·경영정상화 지원
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응 강화

3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

❶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
❷ 고용·사회안전망 확충
❸ 상생·연대·공정 가치 확산

＋

경제구조 대전환

1 새성장동력 확보

❶ 한국판 뉴딜 가속 추진
❷ 미래 전략산업 집중 육성
❸ 주력 제조업 및 유망 서비스산업 혁신
❹ 제2벤처붐 시대 지속 지원
❺ 핵심 인력양성을 통한 생산성 제고

2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

❶ 친환경·저탄소 경제 전환 대응
❷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체계 구축
❸ 인구리스크·저출산 대응 강화
❹ 노동·재정·공공 등 부문별 구조혁신

5대 집중지원 패키지

내수 보강 | 코로나격차완화 | 기업활력 제고 | 고용 복원 | 청년미래지원

재정의 든든한 뒷받침 | **경제·사회 구조혁신 지속** | **법 · 제도개선 신속추진**

완전한 경제회복

1 더 빠르고 강한 회복

◇ 최근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4% 이상의 성장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·투자·수출 등 부문별 활력 제고에 진력

❶ 더 이상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

1 성장 뿐만 아니라 일자리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 달성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 견지

○ 금년 예상 초과세수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*, 백신·방역 대응, 일자리·취약계층 지원 등을 포함하는 2차 추경 편성

* ①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, ②소상공인 피해지원, ③상생소비 지원금

○ 대규모 교부세(금) 증액분 등을 활용한 지자체 추경편성도 적극 독려

2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분간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되, 금융불균형 누적에 보다 유의

3 코로나 대응 한시조치 등은 '질서있는 정상화'를 추진해 나가되, 정상화 과정에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 마련 병행

회사채 매입	▸ 저신용 회사채·CP 매입기구(SPV) 매입기간은 연말까지 연장(現 '21.7.13일)
만기연장 상환유예 (~'21.9월말)	▸ 방역·실물경제·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착륙을 추진하고, 필요시 정책금융기관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*을 2조원 수준(現 1.3조원)까지 확충·대응 * 취약계층 대상 저리대출·보증 확대, 유예이자 분할납부, 금리조정 등 지원 ↳기관별 지원규모(조원): (산은) 0.3→**0.5** (기은) 1.0→**1.2** (신보) 0.05→**0.3**
금융규제 유연화	▸ 만기연장·이자상환 유예조치와 연계하여 연착륙을 추진하되,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 * 은행 외화/통합 LCR 규제 한시적 완화(~'21.9말),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(~'21.12말) 등

4 경제활동 정상화 속도를 높이고 집단면역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백신의 신속한 확보·구매·접종을 재정에서 차질없이 뒷받침[추경]

* 금년 1억 9,200만회분 도입, 공공예방접종센터 증설(267→282개), 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확대

○ 백신접종 진전, 의료역량 확충 등에 따른 위험도 감소와 경제영향 등을 종합 감안하여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

5 글로벌 백신허브로 본격 도약하기 위해 백신생산 확대·국산 백신개발 지원 등 내용을 담은 「K-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전략」 마련

* 국내 백신생산 확대 : 글로벌 백신개발사 위탁생산 및 국내 투자유치 위한 인센티브 확대
국산 백신개발 지원 : 국내 개발사 임상비용 지원, 백신개발 완료전 선구매 추진 등[추경]

❷ 피해가 컸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.

1 그간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문화·예술·공연·체육·외식 등 코로나 피해가 극심했던 분야의 소비 증대로 연결되도록 다각적 지원방안 강구

○ 피해분야 소비창출을 위해 6대 소비쿠폰·바우처를 추가 발행하고[추경], 기존 소비쿠폰도 백신접종 진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용 재개

'20년 8대 소비쿠폰			
농수산	외식	체육	숙박
관광	영화	전시	공연

* ▨ : 집행완료 ▢ : '21년 이월+집행대기

'21년 4+4 소비쿠폰·바우처			
농수산	외식	체육	숙박
통합문화	스포츠강좌	농산물	휴가지원

* ▢ : 집행중 ▢ : 집행대기(오프라인)

+

6대 소비쿠폰·바우처		
농수산	체육	스포츠관람
통합문화	영화	철도·버스

* ▢ : 기존사업 보강 ▢ : 신규

▸ (1차 접종률 50%) 외식·체육·영화·전시·공연 재개 + 스포츠관람 쿠폰 시행 →
(1차 접종률 70%) 숙박·관광 재개 + 철도·버스 쿠폰 시행

○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가 소비가 이뤄지도록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"상생소비지원금" 신설[추경]

▸ (추진방안) 2/4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월별 3% 이상 증가분 10% 캐시백(월단위 환급)
▸ (사용대상) 백화점·대형마트·온라인쇼핑몰·명품 전문매장·유흥업소 사용액, 차량구입비 등 제외
▸ (지급한도) 1인당 30만원(월 최대 10만원) ▸ (기간) 3개월간 시행 후 연장 검토

○ 침체된 지역·골목상권 복원을 위해 지역사랑·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[추경]

2 하반기 대표 소비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전 국민이 함께하는 소비진작 이벤트로 대대적 활성화

○ 대형업체 뿐만 아니라 중소 유통·제조업체의 행사 참여를 적극 지원
* 예)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매장 내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설치

○ 자체 할인여력이 크지 않아 행사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·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행사기간 중 지역사랑·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실시
* (지역사랑) 물량 3배 수준 확대(0.8→2.3조원) / (온누리) 할인율 2배 상향(5→10%p)

3 연초부터 추진 중인 기존 3大 소비패키지는 하반기에도 지속 시행
* ①추가소비 특별소득공제, ②자동차개소세 30% 인하, ③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환급

4 집단면역 전 과도기 상황에서 국제관광이 부분 재개될 수 있도록 방역 안전국가와의 트래블버블(여행안전권역) 추진('21.7월 개시 목표)
* 상호 방문목적 제한없는 입국금지 해제, 격리조치 면제 등(음성확인 전제)

○ 면세쇼핑과 연계한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출·도착 공항이 다른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 개발(현재는 출·도착 공항 동일 상품만 운영)
* 예) 인천공항 출발 → 해외상공 선회비행 → **지역공항 입국**(예: 제주, 부산 등) → **지역관광**

○ 하반기 중 '2021 여행가는 달'을 운영(방역상황을 보아가며 시점 결정)하고, 철도·고속버스 할인권 판매, 각종 지역행사 등 이벤트 연계 추진

❸ 경제반등의 주역인 기업의 氣를 살리고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.

1 기업·경제계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고, 업계 건의 등에 기반한 주요 산업별 도약 지원방안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발표

* 예) 'K-반도체' 전략 → 해운, 배터리(이차전지), 조선, 자동차, 벤처분야 등

○ 특히, 한·미 정상회담('21.5월) 성과에 따른 백신·배터리 등 핵심 분야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근본적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

○ 산업육성 및 경제안보 확보 노력을 법적으로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내용[1]을 담은 특별법 제정[2] 병행

1」 R&D, 인허가 특례, 규제 완화,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+ 경제안보 차원의 핵심기술 보호 규정
2」「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(가칭), 국회 반도체 특별법 논의와 연계

○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신규 프로젝트 수요 발굴, 현장 투자애로 집중 점검·해소, 제도개선 등을 통해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착실히 이행

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연간 및 하반기 추진목표

	계	기업		민자		공공
		발굴	착공	발굴	집행	
연간 목표	**110조원**	18조원	10조원	13.8조원	3.5조원	65조원
하반기	**58조원**	**9.2조원**	**10조원**	**6.4조원**	**1.9조원**	**31조원**

2 '국가전략기술'을 중심으로 세제·금융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 대폭 확충

○ 국가전략기술은 ①반도체, ②배터리(이차전지), ③백신 3대 분야로 구성하고, R&D·시설투자 등 세제지원시 지원 강화('21.下~'24)

* R&D 최대 40~50%, 시설투자 최대 10~20% 세액공제

○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총 2조원+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 집중 지원('21.下~'23)

* 「K-반도체 전략」에서 발표한 '1조원+α 설비투자 특별자금'의 대상·규모 확대

3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 확산 등 최근 정책여건 변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유턴기업 지원 지속

○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·증설 완료기한 요건을 현실적으로 보완(해외사업장 양도·폐쇄 후 1년內→2년內)

○ 첨단분야 유턴 지원(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적용 배제), 입지 지원 강화(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 완화) 등 旣발표 대책 후속조치(시행령 개정)도 차질없이 추진

4 지난 2년간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·임시허가 과정을 통해 안정성 등이 입증된 과제는 후속 법령정비까지 조속히 마무리하여 규제혁신 완성

ICT	▸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·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〈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〉
산업	▸ 1개 영업장에 여러 미용업체가 입주, 공용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 〈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〉
금융	▸ 소상공인이 스마트폰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〈카드단말기 기술기준〉

❹ 수출 6천억불 돌파(+무역규모 사상최대치 달성)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.

1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집중 지원

○ 수요가 높은 미주항로에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(월 2→4회, '21.7~)하고, 주요 항로별로 일정 선복량을 중소·중견기업 화주에 우선 배정*

* 임시선박 : 美서안항로 투입 선박의 중소·중견화주 선적비중을 50→60%이상으로 확대
정기선박(주별) : (美서안) 380TEU, (美동안) 50TEU, (유럽) 50TEU

○ 수출바우처 규모를 확대추경하고, 중소·중견 화주들이 운임상승 걱정 없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 가능한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

* 중소·중견기업 수요를 반영, 국적선사 선복량 확보 및 장기계약 체결(운임 20% 바우처 지원)

2 하반기 수출금융 125조원 집중 공급, 무보 보험·보증 만기연장 조치 및 수은 유동성 프로그램(5종) 운영기한 연장(~'21.9월말) 등 금융지원 강화

○ 기업의 원활한 해외활동을 위해 격리의무 면제, 백신 우선접종 지원을 지속하고,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운영

3 해외수주 2년 연속 300억불 초과 달성을 위해 자금지원 다변화(EDCF·수출금융 등 결합) 등을 포함한 「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」 마련('21.7월)

○ 양대 메가 FTA(RCEP, CPTPP)를 적극 추진하고, 對개도국 개발협력지원을 강화(그린ODA 확대)하는 등 국제협력에 기반한 수출저변 확대 노력 지속

❺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.

1 주요 위기 지역의 경기·고용 등 회복세가 더욱 공고해 질 때까지 「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」 지속 운영

* 5개 지역(울산 동구, 거제, 창원 진해구, 통영·고성, 목포·영암·해남) 지정기간 旣연장(~'23.5월)

○ 특히, 최근 조선업 업황 개선 효과가 지역경제 전반에 빠르게 파급될 수 있도록 숙련인력 복귀 및 신규인력 양성·유입 촉진추경

* 구인·구직 매칭플랫폼 운영('21.8~), 채용연계 교육 확대(600→1,200명), 훈련수당 신설 등

2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, 지자체 주도형 뉴딜,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의 3대 전략을 이어가되, 성과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병행

한국판뉴딜 지역사업	▸ 뉴딜 중심으로 개편된 48개 시·도별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금년 중 0.3조원 집중 지원 ▸ 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적용되는 균형발전지표를 보완하고 적용사업 추가 발굴
지자체 주도형 뉴딜	▸ 우수 지자체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(3분기, 특별교부세 지급 및 균특회계 차등지원) ▸ 뉴딜사업 투자여력 확충을 위해 지방공기업 타법인 출자한도 상향(현행 10%)
공공기관 선도형 뉴딜	▸ 이전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추진 가속화('21년 예산 485억원)

○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대로 6개 과제를 연내 착공*

* (하반기 추가 착공) 서남해안 관광도로, 영종도-신도평화도로,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등

3 **지역기반 혁신**이 중단없이 지속되도록 **연내 기한**이 도래하는 규제자유특구* **39개 실증사업** 관련 규제법령 정비 및 임시허가·특례연장 추진

* 예) 부산 블록체인, 세종 자율주행, 대구 스마트웰니스,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등

○ **특구 실증성과**의 **사업화 촉진**을 위한 **자금·판로** 등 **연계지원**도 강화

❻ 회복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.

1 금년 **가계부채 증가율**을 5~6% 수준에서 **안정적으로 관리**하고,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한 가계부채 부담완화 조치 적극 추진

○ 금리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더 낮은 금리로 **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** 및 **신규대출**이 가능하도록 **보금자리론**에 '서민우대 프로그램' 도입

* 주택가격 3억원<수도권 5억원>/부부합산소득 4,500만원 이하 **6.6만가구** 대상 **금리 10bp 인하**

※ (사례) 현재 변동금리형 주담대 2억원 보유 차주(수도권 5억원 주택, LTV 40%)의 경우,
- [기존 상품유지 + 대출금리 1%p 상승 시] 연간 원리금 약 1,109만원[1] (연 3.73% 수준[2])
- [서민우대 보금자리론으로 대환 시] 연간 원리금 약 993만원[1] (30년 만기, 연 2.85%)

⇒ 서민우대 보금자리론으로 주담대 원리금 연간 △116만원 경감 가능

1」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가정 / 2」 '21.4월 은행 주담대 가중평균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 2.73% + 1%p

2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**지자체** 등과의 **긴밀한 협력** 등 **총력 견지**

○ **체감 가능한 공급성과 창출**을 목표로 핵심 공공택지 사전청약[1], 단기주택 공급 확대[2] 등 **既발표 대책 후속조치**를 신속히 이행

1」 하반기 중 **계획된 3만호** 외 **2천호**('22년 계획물량) **추가청약 방안** 적극 검토
2」 신축 매입약정, 공공전세주택 등을 **하반기까지 3.8만호**, '22년까지 총 8만호 확보

▪ **2.4대책 6월 입법**을 토대로 사업후보지(52곳)의 **예정지구지정** 등을 진행하고, **주민동의 확보** 지원을 위해 **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개편**

* 토지·주택 수용 및 신축건물 취득시 취득세 감면, 종부세 합산배제 등

○ **무주택 실수요자**를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[1], 디딤돌 대출 한도 인상(2→2.5억)과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[2] 등 적극 추진

1」 (현행) 공공택지 15% / 민간택지 7% → (개선) 공공택지 **20%** / 민간택지 **10%**
2」 초기부담을 줄여주는 누구나 집, 지분적립형 주택, 초장기모기지(40년) 등

3 주요국 인플레이션 우려,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**금융·외환시장 안정노력**을 강화하고 **대외신인도 관리**에도 만전

○ 美 주도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의 **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** 및 **주요 품목 공급망 안정화**를 위한 대응 노력 강화

* 대경장·BIG3 등 통해 범정부 대응방향 점검 + 한미 공급망 TF·4대 품목별 한미 협의체 운영

2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

◇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 전반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조기 회복·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에 주력하면서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도 만전

❶ 추가 재정투입 등을 통해 고용시장의 회복 속도를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.

1 고용 조기정상화를 위해 4대 분야 15만개 이상 일자리 추가 창출[추경]

○ 특히, AI·SW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 및 문화·예술·체육·관광 등 피해가 컸던 분야의 일자리 회복 중점 지원

일자리 조기회복	2~3만명	▸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
청년 고용촉진	2~3만명	▸ AI, SW 등 신산업 분야 및 지역기반기업 채용지원 ▸ 체육·공연·관광 등 문화 분야 일자리 ▸ 멘토링 등 교육 분야 일자리
백신방역 안전대응	6~7만명	▸ 백신 접종 보조 및 보건소 인력 지원 ▸ 공공시설·학교·관광지 방역지원 ▸ 산재 예방 등 위한 안전 분야 일자리
취업 취약계층	3~4만명	▸ 노인·저소득층 일자리 확대 ▸ 예술인 일자리 지원

○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특별고용지원업종*에서 고용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90일 연장(180→270일)[추경]

*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운송업, 공연업, 면세점 등 15개 업종

2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노력 병행

직접일자리	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직접일자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'시민제안 방식' 도입 ▸ 직접일자리 참여자 선발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를 우선 선발하는 시스템 도입
고용장려금	▸ 장려금 사업들을 목적별로 재분류, 지원수준·지원금 간 정합성 등 종합 재검토
고용서비스	▸ 6개 정보망으로 분산되어 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'고용24' 시스템으로 통합 추진

❷ 소상공인·중소기업이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.

1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가 패키지 대책 마련[추경]

○ 「소상공인지원법」 개정('21.7월 전망)을 통해 향후 손실보상 법제화

* (지원대상) ❶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, ❷+α <중소기업 등 확대 가능>

○ 기존 피해 소상공인은 행정조치·규모·업종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

* (지원대상) 1회라도 집합금지·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 해당

▪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1%대 저금리 대출 지원도 확대

2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도전을 위한 금융·세제 등 지원 강화

○ 재도전지원금(50만원) 지급을 연말까지 지속하고, 소상공인이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 확대[추경]

○ 폐업 후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「착한 임대인」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[1]하고, 「상가임대차보호법」 개정[2]도 병행

1」 (현행) **현재 소상공인** / 임대상가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 / 사업자등록 필요
(개선) **폐업 전 현행 요건**을 **충족**하면서 '21.1.1 이후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**폐업 소상공인**

2」 **3개월 이상** 집합금지·제한 조치를 받고 **폐업한 임차인**에게 **잔여계약 해지권** 부여

3 코로나 위기로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·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'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' 허용기간 확대

* (현행) 결손금 발생시 직전 1개년도 납부세액에 한해 소급공제 가능 →
(개선) **'21년 결손금**은 **직전 2개년도('19~'20년) 납부세액**에서 공제 허용

※ (사례) 코로나 충격으로 '20~'21년 연속 결손이 발생한 A기업의 경우
- 현행 제도 하에서 '21년 결손분은 직전연도('20년)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'22년 이후 이익이 발생하여 납부세액이 생기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(공제시점 불확실)
- 제도 개선 시 '19년도 납부세액('20년 결손금 공제 후 잔여분)에서 '21년 결손분 공제 가능 → '21년도 법인세·소득세 신고 시 환급 신청

4 동네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 등이 지역 소상공인에 직접 투자하는 '지역기반 상생형' 크라우드 펀딩 시범 추진

* ①**지역신보에서 소상공인 선별** → ②지역신보와 협약을 맺은 **P2P업체**에서 **지역주민 등**으로부터 **투자금 모집** → ③**소상공인에게 대출**(지역신보가 **대출금액 일부 보증**)

❸ 선제적 물가안정 노력과 생계비 절감으로 서민생활 부담을 덜겠습니다.

1 하반기 물가상승 가능성에 대비하여 품목별 맞춤형 수급안정 방안 마련

농산물	▸ 하절기 기상이변 등에 대비하여 선제적 비축물량 확보(양파 10천톤, 마늘 2.5천톤 등)
축산물	▸ 계란 긴급할당관세(기본세율 8~30%→0%) 지원기한 연말까지 연장('21.6월말→12월말)
수산물	▸ 정부비축 수산물(6종)을 수요급등시기에 시중가 대비 10~30% 할인 방출(최대 9,400여톤)
식품·사료	▸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 검토('21년말→'23년말)
철강·철근	▸ 철강용 원자재 및 철근의 신속통관(24시간)을 지원하고 국내 공급 확대

○ 장마·태풍·유가 등 주요 물가 불안요인을 예의주시하면서 물가관계차관회의 중심으로 상황발생시 즉시 대응

2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·통신·식료품 등 생계비 절감지원 지속

식료품비	▸ 농수산물 쿠폰 지원규모 확대[추경] 및 지급방식 개선(쿠폰한도 탄력적용, 적용품목 확대 등)
통신비	▸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등을 위해 이통사·제조사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eSIM 도입방안 마련 ▸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되도록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도매료 인하
주거비	▸ 공공임대주택 통합 대기자 등록제 시범도입(공급주체, 단지와 무관하게 대기자 통합관리) 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 증가시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지원 방안 마련(21.下)

3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

◇ 코로나로 심화된 격차 해소를 위해 부문별 맞춤형 대응 및 고용·사회 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, 자발적인 상생·공정가치 확산 적극 유도

❶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부문별 격차를 줄여가겠습니다.

1 일자리·주거·자산형성 3대 분야에서 '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' 구축

[일자리 :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]

○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(6개월간 월 50만원) 수혜대상이 되는 청년특례 관련 재산요건 완화(3→4억원 이하) 및 취업경험 요건 폐지*

* (현행) 2년 이내 100일(또는 800시간) 미만 → (개선) 취업경험 여부와 무관히 청년특례 참가

○ 민간부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'청년채용특별장려금*' 지원('21.7~)

* 청년(만15~34세)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('20.12~'21.12)한 경우 월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

○ 역동적인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단계별 창업지원 강화

도전	▸ 온라인교육·실전검증[1]·사업화지원[2] 결합 '맞춤형 창업도전 프로그램' 신설 1」교육이수자 중 500명 선정 → 실전창업준비금 300만원 지급 2」생애최초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→ 최대 2,000만원 사업화자금 지원
성장	▸ 청년 창업기업 4대 애로해소(인력·제조·자금·주거) 집중 지원 * (인력) AI개발자 집중양성 → 스타트업 취업 연계 / (제조) 생산업체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(자금) 청년 테크스타 보증 신설(2,000억원/500개 기업) / (주거) 청년 스타트업 공공임대 특별공급 ▸ 청년 전용 모태펀드 신규조성[추경]
재도전	▸ 재도전 응원캠프 운영(실패원인 진단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) ▸ 성실실패기업에 대해 청년전용창업자금 채무감면 비율 상향(최대 90→95%)

[주거 : 청년 주거사다리 복원]

○ 청년층의 도심거주 지원을 위해 수요가 높은 대학가·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전세임대주택 5천호 수준 추가 공급[추경]

○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* 가입기간을 2년 연장('21년말→'23년말)하고, 가입요건도 완화(연소득 3,000→3,600만원 이하 등)하여 지원대상 확대

* 금리우대(+1.5%p) +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(2년 이상 유지시, 납입액 연600만원 한도)

○ 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

○ 입학·취업 등 **주거분리**시 출생일에 따라 **청년 주거급여**[1] **지급여부**가 달라지는 문제 해소를 위해 **연령기준 만19세**를 **출생일→출생연도**로 조정[2]

1」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**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**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
2」 만19세가 되는 해 1.1일 이후부터 지급

[자산 : 미래대비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]

○ 소득수준별로 3구간으로 구분하여 **단계별 맞춤형 자산형성** 지원

- **【소득구간Ⅰ】** 청년 저축액에 정부가 **일정비율 매칭 지원**
- **【소득구간Ⅱ】** 청년 저축시 정부가 **시중이자에 추가 지원**
- **【소득구간Ⅲ】** **소득공제 혜택**을 부여하는 상품 도입

○ 중소기업 재직청년, 군 장병 등 **계층별 자산형성 지원**도 강화

- **【중소기업 재직자】** 금년 **청년내일채움공제** 지원인원 **2만명 확대**, **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기한 연장** 및 **세부담 완화 방안 강구**
- **【군 장병】** **장병내일준비적금***에 대한 **정부지원** 확대

* 기본금리 5% 수준(추가금리 1%p 재정보조 예정) / 이자소득 비과세(납입한도 월 40만원)

※ **자산형성 지원** 등 **「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」** 구축을 위한 **구체적인 방안**을 마련, **7월중 발표**할 계획

2 여성·예술·교육·돌봄 등 주요 취약부문의 격차해소 중점 지원

○ (여성) **조속한 노동시장 복귀** 지원을 위해 **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제도***상 **경력단절 기간요건**을 **완화**(퇴직후 3년 이상→2년 이상)

* 중소·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과 근로계약 체결 시 인건비의 15%(중견)/30%(중소) 공제

- **재직여성의 고용유지 지원** 및 **성별격차 해소 노력**도 지속

* ①위기요인별 맞춤형 고용유지지원서비스 운영(새일센터), ②공공기관상장법인 성별 임금실태 발표

○ (예술) **저소득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, 소규모 기획공연·행사 추가 지원** 등 위축된 **공연·예술활동 회복**에 주력[추경]

○ (교육) **시·도 교육청**과 **긴밀히 협의**하여 하반기 중 **코로나 교육 격차 해소**를 위한 **다각적인 지원 사업**들을 **집중 발굴·추진**

* 중앙정부 추경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분 활용
↳ 예) 교과보충프로그램 및 튜터링 운영, 또래활동 및 교외체험학습, 취약계층 특별 프로그램 등

○ (돌봄) 정부·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**수요·공급실태 파악**을 토대로 **민간 아이돌봄기업 대상 인증제 도입 등 관리체계 구축방안** 검토

❷ 고용·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메워 가겠습니다.

1 한국판 뉴딜 고용·사회안전망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에 주력

국민취업 지원제도	▸ Ⅰ유형 저소득층 소득기준을 중위 50% → 60% 이하로 조기 완화 + 재산기준은 3억원 → 4억원 이하로 완화('21.10월~) ▸ 상반기 운영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「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」 수립(21.12) →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내실화 방안 검토
전국민 고용보험	▸ 특고 고용보험(21.7월~) 제도 안착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및 집중 홍보 시행 ▸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(22.1월~)을 위한 세부방안 수립(하위법령 개정 등)
한국형 상병수당	▸ 연구용역(21.3월~) 등을 토대로 시범사업 모델 구체화(자격요건, 대상질병, 보장수준 등)

2 기존 안전망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빠르고 튼튼하게 확충

○ 신속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당초 계획('22년~)을 앞당겨 '21.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(+4.9만 가구)[추경]

○ 코로나 피해가구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 완화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('21.6월말→'21.9월말 / 6만 가구)[추경]

○ 에너지바우처(저소득층 냉·난방비 지원) 지급기준 완화(+18.7만 가구)[추경]

* (현행) 수급권자 결정시 신청가구 외 직계혈족, 배우자의 소득 등을 고려
(개선) 신청가구 자체만의 소득 등을 고려(부양의무자 기준 폐지)

○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소득구간별로 차등화하여 취약계층 지원 강화

* (현행)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% 초과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% 일률 지원
(개선) 지원비율을 50%를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지원비율 상향

3 법정 최고금리 인하(24→20%)에 따른 취약계층 금융공급 축소 우려에 대비하여 근로자 햇살론(2.4→2.7조원), 햇살론 유스(0.2→0.3조원) 등 공급 확대

❸ 경제·사회 전반에 상생·공정의 가치를 지속 확산시켜 가겠습니다.

1 기부·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 기부자 및 우수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, 착한 기부자에게는 '아름다운 납세자' 수준 혜택부여 검토

*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, 고궁 특별행사 초청 등

2 중소기업 기술보호, 공정거래 관행 착근 등을 위한 정책노력 지속

○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피해신고 및 행정조사를 활성화하고, '기술보호 정책보험*' 도입 검토('21.下)

*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법적대응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보조

○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금지급 방법·기일을 명시한 서면발급 의무화('21.下,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)

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

1 새 성장동력 확보

◇ **한국판뉴딜 가시적 성과 창출과 함께 미래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, 제조업/서비스산업 혁신·벤처육성·핵심인력 양성 등을 적극 추진**

❶ 한국판 뉴딜을 가속 추진하여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.

1 재정투자 '21년 22.5조원을 뉴딜 10대 대표과제* 중심으로 차질없이 집행하여 **디지털·그린뉴딜·안전망강화** 분야에서 **가시적인 성과 창출**

* 데이터댐(3.5조원), 지능형정부(0.75조원), SOC 스마트화(2.7조원), 그린에너지(1.6조원), 친환경 미래모빌리티(2.6조원) 등 **투자규모 약 15조원**('20~'21)으로 구성

디지털	▸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, 초·중등 38만교실 고성능 WiFi 구축, 스마트상점 2.5만개 기술보급, 전국33개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,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 시스템 구축
그린	▸ 녹색건축 활성화 기반 구축,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,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 구축 착수, 연도별 공급의무 비율(RPS) 마련, 전력망 계통 보강
안전망	▸ 디지털·저탄소경제 전환 과정에서 피해 입는 산업의 노동자·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마련, 최고 수준의 AI 인재양성을 위한 AI 혁신허브 신설

○ 국민체감 성과 극대화를 위해 뉴딜 참여예산 공모대회 우수사업을 '22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

2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(31개 법률 中 입법완료 15건)는 **하반기 내 조속한 입법 마무리***를 목표로 **국회 등과 적극 협력**

* 국회 계류중인 환경영향평가법, 데이터기본법, 탄소중립기본법 등 16건

○ 입법과제 후속조치 성격인 핵심 제도개선 과제*(14개)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고, 현장중심 규제개혁 과제(現 191개)도 지속 발굴·개선

* 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, 배출권거래제 기술혁신·이행방안,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방안 등

3 뉴딜 국민참여 확대와 민간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 조성을 검토하고,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*

* (기존) 세제혜택을 받는 '인프라'는 「민간투자법」 상 사회기반시설에 한정 (개선) 인공지능,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인프라 개념 도입

○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뉴딜 정책금융은 '21년 「17.5조원+α」 공급계획(5년간 100조원) 초과달성을 목표로 적극 지원

※ 한국판 뉴딜 1주년(7.14)을 계기로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, 안전망 강화 확대·개편 등 '진화하는 뉴딜, 한국판 뉴딜 2.0' 발표 추진

❷ 미래 전략산업이 새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습니다.

1 BIG3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 도약하도록 과감한 재정·세제지원과 함께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, 백신개발 자립화 등 핵심과제 집중 추진

❶ 친환경차 취득세 및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기한 연장 추진, 수요창출을 위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* 시범사업 개시 및 법적근거 마련

* 대규모 수요자(렌터카·대기업 등)에 친환경자 구매목표(예:10%) 부여 (친환경차법 개정)

❷ 반도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집중지원[1]과 함께, 미래차-반도체기업-IoT기업간 협업체계 바탕으로 차량용반도체 공급망 내재화[2] 추진

1」 R&D 세액공제, 설비투자 특별자금 신설, 전력 인프라 구축에 최대 50% 지원 등
2」 기업간 협업모델 발굴·지원,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, 전주기 자립화 지원체계 구축

❸ 바이오 양산·사업화를 위해 핵심 원부자재·생산장비 국산화[1]를 추진하고, 신약·첨단 의료기기 3대 협업사업[2]도 본격 시행

1」 16개 핵심 소부장 R&D 지속 지원 및 지원확대(백신 원부자재 등)
2」 국가신약개발사업,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,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

2 D.N.A. 생태계 기반으로 新산업을 발굴하고, 혁신서비스를 제공*

* (**데이터**)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운영 (**네트워크**) 5G 융합서비스(실감콘텐츠 등) 제공 (**인공지능**) AI 반도체 산업 육성, 지역주력산업 기반의 AI 집적단지 착공 등

○ 마이데이터 산업의 全분야 확산(現 금융·의료·공공에 한정)을 위해 개인주도 데이터 전송권을 규정하는 법적기반 마련(개인정보보호법 개정)

3 기술급변에 대응, 시장 수요가 큰 5대 유망 新산업의 육성·지원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, 문제해결형 대책을 순차 발표

클라우드	▸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적극 활용, 5개 분야(금융·제조·물류·에너지·교육) 인프라·서비스 고도화
블록체인	▸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 보완 추진 및 사업 대형화 추진 검토, AI·IoT 등 융합기술 개발지원
지능형로봇	▸쇼핑몰 등에 5G·AI기반 로봇서비스 융합실증, 서빙·조리·교육 등 新비즈니스 모델 개발
헬스케어	▸마이 헬스웨이 플랫폼(국민 건강정보 통합), 임상정보·유전체 결합 등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
메타버스	▸주요명소 3차원 공간정보 제공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, 가상-현실세계 연결하는 양방향 XR 서비스 제공

❸ 주력 제조업·유망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.

1 제조업 친환경화를 위한 「탄소중립 산업공정 R&D 전략」을 수립(3분기중)하고,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* 추진

* 미래차·조선 등 10대 업종별 디지털 연대를 통해 업종내·간 협업기반 플랫폼 구축

○ 조선업 세계1위 수성을 위해 스마트야드·無탄소선박 기술개발 지원, 해운업 리더국가 도약을 위한 선박확충 등 종합대책 발표

2 소부장 핵심품목(338+a개)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를 지속 추진하고, 미래선도품목(65개)의 공급망 창출을 위한 R&D 중점 추진

○ '소부장 으뜸기업' 20여개를 추가 선정하고, 소부장 특화단지 및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인센티브(토지이용특례, 임대료 감면 등) 강화

3 서비스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한걸음모델 '21년 상반기 과제* 합의 도출 및 제도화 추진

*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 등 2개 과제

○ 新서비스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방안(10월), 수산물 콜드체인 구축방안(12월),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추진방안(12월) 등 수립

○ 미디어·웹툰특화 1인 창조기업 사업화·해외진출 지원센터 추가 구축

4 문화강국 도약기반 구축을 위해 콘텐츠·게임 등 K-문화산업을 적극 육성*하고, 한류 확산을 위한 재외문화원 중심 문화축제 개최(10월)

* AI, 5G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융합콘텐츠 개발·제작지원, 비대면 해외진출 지원 등

○ 기초수급자 · 차상위 등 취약계층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인원을 확대[추경]하는 한편, 장애예술인 지원계획도 수립

❹ 제2벤처붐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벤처·창업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.

1 벤처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입법 추진과 함께 CVC 제한적보유 시행(12월) 준비

○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현장 요구가 높았던 스톡옵션 제도 개편[1], 벤처기업법 전면 재정비[2] 등 「벤처생태계 보완방안」 수립(9월)

1」 스톡옵션 부여대상 범위 확대, 행사요건 합리화 등 활용성·인지도 제고 방안, 세제지원 확대 등 법·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전반적 검토

2」 벤처기업법 일몰기한('27.12말) 폐지, 육성·지원 근거를 공고히 하고 지원제도 정비

○ 벤처자금 공급 활성화를 위해 「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」[1]를 도입하고, 「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」[2] 시범사업(500억원, 중진공) 실시

1」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 이전에, 추후 결정되는 공모 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장기투자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제도

2」 융자기관이 벤처기업 신주인수권 획득하고, 후속 투자자금으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저리 대출

○ 스케일업 펀드(유니콘·예비유니콘 기업 집중투자) 규모 확충[추경]

○ 벤처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투자펀드를 확대[추경]하여 조인트벤처 설립[1] 및 엑셀러레이팅 지원[2]도 강화[추경]

1」 글로벌 투자펀드 주목적 투자대상에 조인트벤처도 추가

2」 글로벌기업과 원활한 기술협력 추진토록 자금조달, 거래처확보 등 지원

2 新산업 분야 창업지원을 위해 신산업 범위, 지원절차 등을 담은 세부규정을 마련*하고, 핀테크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 제정

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및 시행령 전부개정 예정('21.下)

○ 공공기관이 신기술 실증 인프라를 제공하는 K-테스트베드[1] 확산을 위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참여업체에 인센티브 지원[2]

1」 (수자원공사) 수도·물에너지 (한국도로공사) 자율주행 (인천국제공항공사) 공항운영관리
2」 공공조달(혁신제품) 지정시 우대, 해외실증 연계지원(한국무역협회 등)

❺ 新기술분야 핵심인력을 대규모로 양성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.

1 新기술분야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관련분야에 대한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지원범위를 확대*하고, '22년 예산에 집중 반영

* ('21) AI·빅데이터 등 6개분야 → ('22) 미래차·그린뉴딜 등 22개 신기술분야

○ SW분야는 5년간('21~'25) 총 41.3만명*+α 규모로 양성 추진

* **8.9만명(추가 양성)** + 32.4만명(기존 공급규모, 정규과정 11만 + 정부사업 21.4만)
  ↳ (단 기) 벤처·스타트업 아카데미, 경단녀 등 SW전문교육, 기업 자체 현장훈련 등
  (중장기) 기업·대학협력형 고급인재양성사업, 군장병 대상 AI·SW교육 등

○ 반도체 전문인력(학사·전문·실무인력)은 10년간 3.6만명 양성하고, 의사과학자 인력(바이오경쟁력 및 고령사회 대비)도 별도 Track으로 양성*

* 학위-임상수련-전문의 등 과정별 연구활동 지원, 임상-연구간 양립환경 조성, 의과학자로의 연구·진로지원 강화 등 → **'21.下 인재양성방안 마련, '22.上 시행**

2 디지털 인재양성 정보를 통합제공하고, 훈련자의 맞춤형 경력 개발을 설계해주는 「K-디지털 인재양성 체계」 구축* 추진

* 기존 직업훈련포털(HRD-net)을 개편·고도화하여 디지털 분야 정보제공 강화

○ 기업주도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되, 삼성(SSAFY), SK(하이파이브), 포스코(AI·Bigdata) 등 대기업이 설계·훈련하고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新산업 우수 훈련모델* 확산 추진

* (운영) 기 운영인력에 더해 年 교육인원 1,000명 이상 추가(재원은 정부+민간 공동부담)
(대상)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(훈련생 중 일정비율은 취약계층·지역인재 등 선발)

3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선도대학간 네트워크 구축, 산학협력 마일리지제도[1] 활성화, 조기취업형 계약학과[2] 모델 확산 등 추진

1」 대학·교수·지역산업체 등이 산학협력 참여시 공공입찰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
2」 (1학년) 전공 기본교육 (2·3학년) 현장실무 교육(대학·기업 공동설계) + 연구 등 심화교육

○ 대학·중소기업 등이 AI 등 新기술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기업 등 유휴 R&D장비를 이전·지원하는 등 시스템 개선*

* 유휴장비 이전시 정부가 점검·이전·수리비 지원, 장비활용종합포털 구축하여 공급-수요자간 매칭지원, 신기술 연구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력공급망 구축 지원

2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

◇ 2050 탄소중립 등 친환경·저탄소경제 전환 노력을 강화하고, 미래 구조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기업의 사업재편지원, 인구리스크 대응, 노동·재정 등 구조혁신 추진

❶ 친환경·저탄소 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

1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, 연내 NDC(온실가스 감축목표) 상향 제출하는 등 2050 Net-Zero 추진 본격화

○ 「탄소중립 3+1전략」(3대분야 10대과제)의 주요 정책[1]을 순차 발표하고, 각 부처 추진중인 업무에 탄소중립 목표를 추가해 정책전환[2] 추진

1」 K-순환경제 혁신로드맵(3Q),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략(4Q), 지역에너지산업 전환(4Q) 등
2」 '저탄소·친환경 기술개발'을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로 포함(공정위) 등

○ 탄소중립 기본법안 및 국가재정법을 제·개정하여 '22년 「기후대응기금」을 신설하고, 4대 핵심분야에 대한 기금 운영계획(안) 마련

❶ 온실가스 감축지원	▸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, 중소기업 온실가스 진단/컨설팅 지원
❷ 신유망·저탄소 산업생태계	▸ 탄소중립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,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 등
❸ 공정한 전환	▸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,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등
❹ 탄소중립 기반구축	▸ CCS(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기술) 실증기반 구축, 석유대체 친환경기술 개발

2 글로벌 ESG 규율 강화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와 ESG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K-ESG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,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K-녹색분류체계 수립

○ 민간으로 ESG 확산 촉진을 위해 ESG 정보 플랫폼 구축, ESG 경영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[1] 등을 추진하고, 공공기관이 ESG 이행[2] 선도

1」 산업부·중기부 등 관계부처 재정사업 지원시 우대 방안을 마련
2」 공공기관의 ESG 공시항목 확대, 연기금의 ESG 투자 활성화 등

3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산을 위해 신안 등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조기 착공*을 지원하고, 원스톱샵 특별법 제정(의원발의안 국회 기제출) 등 인허가 제도 개선 추진

* 집적화단지(지자체 주도로 수용성 확보해 운영하는 단지) 지정하여 인허가의제 추진

○ 친환경에너지 사용 확산을 위해 K-RE100[1], K-EV100[2] 이행을 지원하고, 2050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부표 보증금제 도입, 수거 강화 등 추진

1」 (RE100) 기업 사용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 → 재생에너지 전기구매 및 자가생산 지원
2」 (EV100) 기업 보유차량 전기·수소차 전환 → 참여기업 구매보조금 지원

○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시범도시(3개)를 착공하여 수소 사용 기반을 구축하고, 수소충전소 인허가의제(7월)*, 청정수소 인증제 등 도입

* 환경부장관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시 관련 지자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

4 **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**에 대비하여 **우리 통상이익**에 **부정적 영향이 최소화** 되도록 **적극 대응**[1]하고 **기업역량 강화**[2], **탄소가격체계 정비** 등 추진

1」 무역장벽화 우려 표명, WTO규범에 합치하는 제도 마련 촉구, 면제·감면 최대 확보
2」 탄소저감 시설비용·R&D 지원, 환경성적표지 제도 개선(탄소량증빙에 소요되는 비용감축 지원)

❷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하겠습니다.

1 기업의 **전략적인 사업재편 수요 발굴**과 **맞춤형 지원**을 위해 「**사업재편 파트너십***」을 **구축**

* (구성) 관계 기관, 업종별 민간 협회·지자체·금융기관·VC 등
(기능)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 주기적 발굴, 애로사항·규제 개선, 금융지원 모니터링

○ **기존 사업재편 제도**의 **활용도 제고**를 위해 **사업전환법 승인대상**을 **신제품 생산, 경영·사업 혁신기업**에까지 **확대***

* (기존) 업종전환·추가 → (개선) 미래유망 신제품 생산, 생산시설 저탄소화 등

2 **전통·신산업**내 **사업재편** 촉진을 위해 **전용펀드**(500억원)를 **신설**하고, **기존 프로그램들**을 **체계화**하여 **산업혁신·재건 프로그램*** **구축·운영**

* (전통산업)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, 기업구조혁신펀드, 사업재편 전용펀드(신설) 등
(신 산 업) 혁신성장산업지원 특별자금,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금, 스마트 융합 보증 등

3 **중소·벤처기업**의 **M&A 지원**을 위해 시장에서 **마중물 역할**을 하는 **모태펀드 내 M&A 펀드규모**를 **확대**(0.1→0.2조원), **세제 인센티브 패키지 보강***

* ❶공동 사업재편에 따른 자산양도시 과세이연 특례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 축소(3→1년)
❷기술혁신형 M&A 법인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 검토

○ **M&A 활성화**를 위해 **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유형**의 **M&A**는 **신고의무 면제범위**를 **확대**[1]하고, **M&A 중개기관 플랫폼**[2]**간 연계 강화** 등 추진

1」 M&A 前 기업인수 목적의 PEF, SPC 설립·출자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의무 면제 등
2」 중소·벤처 M&A 지원센터(기보·신보·IBK·VC협회 등), M&A 거래 정보망(중기부) 등

4 **디지털·저탄소화** 등에 따른 **기업의 사업구조 개편** 과정에서의 **원활한 인력전환**을 **지원하기 위한 방안**을 **마련**

○ **지역별 주력산업 인력**의 **新산업 유입방안***, **신산업 분야**로의 **직무전환**을 위한 **교육·훈련 지원방안** 등 **구체화** 예정

* 지역별 주력산업의 구조 개편과 지역 뉴딜사업간 연계 추진하여 新 산업으로 인력 흡수

❸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인구리스크·저출산 이슈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.

1 「제3기 인구정책 TF」를 통해 3대 인구리스크(인구감소, 지역소멸, 초고령사회 임박)에 대한 핵심과제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

❶-1 인구절벽 충격 완화	▸ 여성 경력유지·경력단절 완화, 베이비붐세대 노동시장 이탈 감속, 외국인 인력 부족문제 대응,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체계 마련
❶-2 축소사회 대응	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경쟁력 강화, 산업현장 숙력인력 양성
❷ 지역소멸 선제 대응	▸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, 지방위기지역 자립역량 강화, 혁신도시 확충
❸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	▸ 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, 급증하는 고령층의 건강권 보장

○ 제1기('19년), 제2기('20년) 인구정책 TF 발표 과제(1기: 101개, 2기: 225개)*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

* (1기) 고령자 계속고용, 퇴직연금 개편 등 (2기) 경단녀 예방, 평생교육·직업훈련 연계 등

2 「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」에 따른 「저출산 극복 5대 핵심패키지」 지원방안*을 구체화하고, '22년 예산안에 집중 반영

* ❶부부 육아휴직 활성화(동반휴직시 최대 300만원 등), ❷영아수당 신설('22년 30만원, 단계적으로 '25년 50만원), ❸임신출생 축하꾸러미 개편(임신출산 바우처 100만원, 출생시 200만원), ❹공보육 확충('25년까지 이용률 50%), ❺다자녀지원 확대(3자녀이상 가구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, 임대주택 2.75만호 공급 등)

○ 고령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해 「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」, 「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」, 을 마련하고, 노인대상 디지털 돌봄서비스 개발 확대

❹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노동·재정·공공부문 혁신을 강화하겠습니다.

1 '21.7월부터 5인이상 全사업장 주52시간 도입에 대비하여 인건비 지원, 컨설팅 등 정부지원 지속 및 52시간제 보완제도* 확산에 노력

*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(3→6개월), 연구개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(1→3개월)

○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실태 관리를 강화*하는 한편, 공무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해소 등을 위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

* (예시) 과도한 임금피크 기간·인원, 퇴직 3~4년전 조기 현업배제 등 부적절한 운영 개선

2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「한국형 재정준칙」 법제화와 함께 유사·중복사업 지출구조조정, 다부처 연계 협업예산(17대 중점과제) 확대

○ 혁신조달 강화를 위해 혁신구매 목표·혁신제품 수를 확대[1]하고, 국유재산 특례관리 강화[2]를 위해 신설특례 사전심의, 사후존치평가 시행

1」 (혁신구매 목표) 물품구매액의 1%→1.2%, (혁신제품 수) '20년 345개→'21년 900개 이상
2」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, 무상양여, 장기 사용허가 등 특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

3 공공기관 윤리경영 평가 강화, 징계수준 상향 등을 추진하고,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*은 증원·출연제한을 강화

* 40개 기관(자산 2조원이상, 정부 손실보전)은 기관별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관리

Ⅳ. 2021~2022년 경제전망

	2020년	2021년e [수정]	2021년e [당초]	2022년e
■ 경제성장률(%)	△0.9	**4.2**	3.2	**3.0**
■ 취업자증감(만명)	△21.8	**25**	15	**25**
- 고용률(%, 15~64세)	65.9	**66.4**	65.9	**66.8**
■ 소비자물가(%)	0.5	**1.8**	1.1	**1.4**
■ 경상수지(억불)	753	**770**	630	**660**
- 수출(전년비, %)	△5.5	**18.5**	8.6	**3.8**
- 수입(전년비, %)	△7.1	**22.4**	9.3	**3.0**

1 2021년 경제전망

1 (성장)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반등하면서 4.2% 성장 전망

○ 위기前 GDP 규모는 회복하겠지만 '20~'21년 평균성장률은 1.7%로 위기前 성장경로 복귀를 위해서는 정책노력 지속 필요

○ 내수의 경우 거주자 국내소비 기준으로는 취약부문 보강을 위한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위기 이전수준 회복 기대

* 민간소비(국내+해외소비) : ('19년) 894조원 → **('20년) 849조원 [△5.0%]** → **('21년) +2.8%**
- 거주자 국내소비 : ('19년) 825조원 → **('20년) 802조원 [△2.8%]** → **('21년) +2.8% 이상**

2 (고용) 최근 회복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, 금번 일자리 추가 지원 효과 등으로 취업자수 +25만명 증가 전망

○ 연간으로는 작년 감소분(△22만명) 이상을 회복할 전망

○ 월 취업자 수도 위기직전('20.2월, 2,751만명) 수준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노력 강화

* 취업자수(만명, S.A.) : ('20.2월) 2,751 → ('21.1월) 2,649 → **('21.5월) 2,731**

3 (물가) 하반기 공급측 수급여건 개선, 물가안정 정책노력 등으로 소비자물가는 1.8% 상승 전망

○ 국제유가, 기상여건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하여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(2%)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

4 (경상수지) 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서비스수지도 개선되면서 작년보다 소폭 확대된 770억불 흑자 전망

○ 수출(통관) 18.5% 증가(6,075억불), 수입(통관) 22.4% 증가(5,725억불)로 모두 역대 최대치(무역규모 1조 1,800억불) 갱신 예상

* 수출규모(억불) : ('17) 5,737 ('18) 6,049<역대 최대> ('19) 5,422 ('20) 5,125 ('21^{e}) 6,075
* 무역규모(억불) : ('17) 10,522 ('18) 11,401<역대 최대> ('19) 10,456 ('20) 9,801 ('21^{e}) 11,800

2 2022년 경제전망

1 (성장) '22년에도 회복국면이 이어지면서 3.0% 성장 전망

○ '20~'22년 평균성장률 2.1%로 위기前 잠재수준과의 격차 크게 축소

❖ 위기 이후 회복속도 : 금번 위기가 '98년 외환위기 당시 역성장에서의 회복속도 보다 빠른 수준

▸ 성장률(%) : [코로나 위기] ('17)3.2 ('18)2.9 ('19)2.2 <평균 2.8%> ('20)△0.9 ('21)4.2 ('22)3.0 <평균 2.1%, 위기전 대비 76% 회복>

[외환위기] ('95)9.6 ('96)7.9 ('97)6.2 <평균 7.9%> ('98)△5.1 ('99)11.5 ('00)9.1 <평균 5.1%, 위기전 대비 65% 회복>

▪ 내수 : 이연된 소비 분출이 본격화되면서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고, 내년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

* 민간소비(%) : ('19) 2.1 → **('20) △5.0 → ('21^{e}) 2.8 → ('22^{e}) 3.5**

▪ 수출 : 신흥국 중심 글로벌 경기회복세 및 반도체 경기호황 지속 등으로 높은 기저에도 불구 3.8% 증가 전망

*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출 6천억불 상회 예상

2 (고용)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제약에도 불구 서비스업 고용이 본격 회복되면서 '21년과 동일한 +25만명 전망

* 생산가능인구 증감(만명) : ('18) 7.4 ('19)△5.6 ('20)△23.1 ('21^{e})△22.5 ('22^{e})△24.6

○ 기저·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 감안시 '21년 보다 강한 개선흐름

3 (물가) 농축산물, 국제유가 등 공급측 상승압력 완화로 올해보다 오름폭이 둔화되면서 소비자물가 1.4% 상승 전망

○ 다만,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본격적인 수요회복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서민 생활물가 관리 노력 지속